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 /

# 직접 민주주의의 꽃인가 족쇄인가

주민소환관련법 통과에 따라 주민들이 뽑은 정치인을 스스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꼽힐 '민주주의의 꽃'으로 비유되는 주민소환제 실시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지방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족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소환제를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정치인, 전문가 등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정치인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 뽑은 권리가 있다면 해임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체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는 제도 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정치인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례가 더 많고,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 과정에서 임기를 모두 마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방행정이 파행으

## 시민단체 등 '민주주의 진일보' 긍정 평가

### 지역 분열·남용 우려...한나라 개정안 추진

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연출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현실상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법 이전에 정치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라는 주장이다.

주민소환제 찬성론자들은 ▲실패한 선거 결과를 바로잡을 수 가능 ▲제도 존재 자체로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수단 ▲무능력·부정직·무책임한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해임할 수 있어 공직자의 계속적인 책임감 부여 ▲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과 공직자들의 행위 감시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잠복되어 있는 문제점도 많다. 특히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상 오·남용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처럼 정치적 편향과 지역색이 강한 곳에서는 악용 소지는 물론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주민소환관련법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되자 주민소환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주민소환법 남용방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 반대론자들은 ▲다수가 선출한 공직자를 소수가 해임하는 위험한 통제장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악용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융기있는 지도력 발휘보다는 단기적인 인기여 영합하는 제도 시행 ▲다양한 이유로 소환 위협에 시달릴 수 있어 능력이 출중

한 사람들이 공직 진출을 기피 ▲지역사회의 극심한 분열 초래 ▲소환투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정치적 혼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입법 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주민소환제가 악용의 소지는 있으나 이는 마치 "요리용 칼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요리에 쓰지 않는 경우와 같다"는 말로 반대론을 일축한다.

주민소환은 현 상태로도 청구요건이 까다로우며 성사 자체가 어렵고, 소환에 대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어 소환이 무산될 경우 소환을 추진한 세력이나 단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동훈 광주전남개발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세력이 지방정치인 소환을 추진하더라도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시민단체들이 이를 막는 시민운동을 펼칠 것이고, 시민들의 의식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물러나는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

# “호남 기대 충족 못시켜 아쉬워 지리산 산행하며 쉬고 싶다”

“박정희 정권에서 면사무소 9급 서기로 출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까지 40년 동안 대과 없이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마치게 돼서 행운입니다.”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친 김완기 인사수석(사진)은 “공직 생활동안 성원을 보내주시던 모든 광주·전남 지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호남 인사들이 정부에 중용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가고 역할을 하라던 지역민들의 요구를 능력 부족으로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리산 등에서 산행을 하며 심신을 추스릴 예정이라는 김완기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역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다 보면 인사와 정책 등에서 호남의 기대를 모두 채우기는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는 그동안의 왜곡된 제도나, 사회구조 등을 바꿔



나가는 장기적 국정 과제 수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목전의 이해나 성과를 놓고 평가하기 보다는 시대정신과 역사 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참여정부에 냉소적인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시스템 및 성과인사가 다음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는 김 수석은 “어찌됐던 무거운 책임을 지는 공인의 입장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마음은 편하다”며 “지역에 돌아가게 되면 지인들과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며 월드컵 응원에 나설 생각”이라고 소회를 털어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법안 첫 추진 광주시민단체회원들

“주민소환제는 국민 주권 시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주민소환운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기획팀은 3일 광주시단협 사무실에서 지난 3년 동안의 주민소환제 제정 운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동훈 광주전남개발연대 사무처장과 누리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기훈 등 주민소환조례운동본부 기획팀은 “주민소환제는 단순히 비리 정치인에 대한 견제 장치라 아니라 주민들이 지지한 정치인에 대한 보호장치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법 통과에 ▲정치인들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주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뽑은 정치인이 잘못된 행정을 펼 경우 소환해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자신이 뽑은 대표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장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3년 7월 광주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기획팀원들이 3일 한자리에 모여 주민소환법 통과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유동훈 광주전남개발연대 사무처장과 누리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기훈, 김강렬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광훈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장, 박정순 광주YWCA 교육부장, 배민희 광주YWCA간사, 임승호 광주시단협 정책부장(사진 왼쪽부터).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국회 통과 환영...국민주권시대 활짝”

전남개발연대의 제안에 따라 광주시단협이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 시민단체 연대사업으로 추진한 주민소환제 제정 운동에는 200여명의 회원과 25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동참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의 무관심과 “정치인들이

소환제를 받아들여줬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만 결국 소환제의 필요성을 느낀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법 제정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소환제의 부작용과 관련, 법적 견제장치가 충분히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 소환

제를 악용하려는 단체나 세력이 있다면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소환 실패에 따른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박계동 ‘술집 동영상’ 유포 논란

### 박 의원 “정치적 의도있다”... 명예훼손 수사의뢰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야당 의원의 ‘술집 동영상’이 3일 인터넷에 떠돌아 유포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이 또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문체의 동영상은 한나라당 박계동(사진) 의원이 카페로 보이는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물레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영상은 총 51초 분량으로 편집됐으며, 화면에는 박 의원과 해당 여성 등 2명만 등장한다. 이 동영상은 현재 네티즌들이 ‘퍼나르기’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보도 자료를 내고 “3일 말 서울시장 영입



활동을 하던 박바지 시점에 청담동에 있는 ‘공개된’ 카페를 3차례 이용한 적이 있다”면서 “전직 청와대 비서관 등 선우배들과의 모임이었으며,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가 고성능 소형 촬영 장비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2시간 분량중 가장 의혹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51초만 편집해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면서 “3월에 촬영한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몰가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내일중 명예훼손 등으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을 내려다 보시지 마시구  
혀다 보아주세요!

**승이어린이집**  
최고 승승기  
02-2209-7211

**리플유치원**  
최고 합승기  
02-2209-7211

**새락예술어린이집**  
최고 합승기  
02-2209-7211

**두른소아과의원**  
최고 합승기  
02-2209-7211

**동선과사람들**  
최고 합승기  
02-2209-7211